

'코로나 수능' 3차 유행 분수령...철저한 방역관리 나서야

무증상 감염에 추운 날씨 겹쳐 당일 유증상자 가려내기 한계 우려
수험생·감독관 증상 유무 지속적인 확인 등 세심한 조치 필요
수능 후 분위기 느슨·대학별 고사 기준 제각각...대책 마련 절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능이 코로나19 3차 유행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후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수능 당일 열이 나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내 별도시험실에 격리해 시험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데다 추운 날씨까지 겹쳐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능 당일 전국 일반시험장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건물 입구에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의심증상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1차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시험장별로 실내에 따라 마련한 장소에서 2차 측정·증상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일반시험실에서, 발열·증상

이 지속하면 별도시험실에서 각각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추워진 날씨에 체온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보다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능 이후 수험생과 감독관 등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수능'과 더불어 수능 이후 안전 관리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교육청별로 관리 기준이 다르고 수험생 이벤트 등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시험장 방역과 수험생·감독관들의 진단검사 등 증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능 이후 곧바로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응시 허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수능의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대학별 고사의 경우 확진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데다 권역별 고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역시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달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대학 자체 고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 합동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수능 후 25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나 음주·흡연 등을 집중적으로 실행 예정이지만 수능 이후 기말고사까지 기간에 대한 관리도 물론이고 타 지역 방문 수험생에 대한 방역 대응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6일 4일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역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진 데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져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 선제조치 등 방역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11일까지 모든 초·중·고에 3분의 1만 등교하게 하는 등 수능 이후 관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통법규 상습 위반, 법 잣대 '엄격해졌네'

무면허·음주운전 등 항소심서 형량 되레 높아져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원 시각이 엄격해지고 있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 데도,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남군 화원면 앞 도로에서 면허없이 2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에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

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B씨는 지난 4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무보험 차량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B씨는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도 제거한 것으로 드러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배워요 2일 광주 북구청청장어린이집에서 구청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아이들에게 화재시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노동계, 폭발사고 3명 사망 광양제철 책임자 처벌 요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폭발로 3명이 사망한 사고(광주일보 11월24일 6면)와 관련해 노동계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코스컨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는 포스코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1일 '3연주공정'에서도 산소배관 밸브 조작중 폭발로 3명이 사망했는데 6년이 지난 올해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포스코의 반성도 대책도 없는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고이고,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준작업 미준수·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구축의 요구에 포스코는 묵묵부답·무대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는 18일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감독하고 공장 내 노후화된 설비, 산소 공급배관·밸브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정비 및 보수 시 안전 작업절차 이행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청년 메디컬그룹 개인회생 인가

대표원장 등 4명 회생절차 개시...법인은 아직 결정 안돼

내년 1월11일까지 회생채권 등 신고
법원이 부도 위기에 놓인 광주 청년 메디컬 그룹 병원장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01단독 관재인 판사는 전날 청년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와 아내, 서광주 청년요양병원 대표원장 B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C씨 등 4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표원장인 A씨의 채권자만 150명에 이르고 B씨의 채권자는 69명, C씨는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 채권자들에게 회생 개시 결정 통지서와 채권 신고 안내, 포괄적 금지 명령 통지서 등을 발송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신고토록 했다.
A씨 등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난에 부딪혀 지난해 12~13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었다.

A씨 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청년인베스트먼트, 씨와이, 청년홀딩스, 서연홀딩스, 광개토001도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낸 상태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청년 메디컬 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년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다.
A 대표는 이와관련, "채권자 중 친·인척과 지인 등 40여명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렸다"면서 "개인별로 수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빌린 했지만 진본으로 빌렸을 뿐 '고리'를 주고 투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